

광주 도시공원 '개발' vs '보존' 논란

리뷰 2017

⑧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 개발

건설업체들 개발 눈독 민·관거버넌스 기준 마련 특례사업 1단계 공원 4곳 우선협상대상자 내달 결정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위험 판결'로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는 예견돼 있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미흡,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민선 4·5기는 이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뤘다. 민선 6기 들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의 부지에 각종 공원

시설을 조성한 후 부지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개발은 모두 고층아파트 단지 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도시공원의 아파트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이에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했으며, 건설업체 또한 광주에 얼마 안 남은 개발대상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점에서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

광주시는 2조원에 이르는 매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원 일몰제 대비 광주시민연구모임'을 구성해 2개월여 간 연구·협의한 후 작성한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던 시민사회단체는 민관거버넌스 참여를 공식화하고 지난 8월 3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거버넌스에서는 우선 도시공원 25곳

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는 한편 공원조성소 위원회와 민간공원특례사업소위원회를 분류해 착수했다.

우선 도시공원 대상지는 25곳에서 1단계 사업 대상인 마곡·송암·수랑·봉산공원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지난 4월 26일 공모를 통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평가단의 재구성을 주장해 갈등 양상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까지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몇 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후 민관거버넌스가 스카이라인 유지, 시민접근성, 장애인접근성, 비공원시설 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기준에는 20층 이하 고도 제한, 비공원개발 면적의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1단계 심사를 맡을 시민심사단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수랑·마곡·송암·봉산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년 1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안심사위원회와 함께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미집행 도시공원 21개소에 대해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에서 공원별 조성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여전히 광주시가 도시공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1단계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공익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앙공원을 비롯한 25개 광주 도시공원의 일몰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올 상반기부터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 사진은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자료사진>

여성근로자들 "화장실 맘대로 못 써요"

전남여성플라자 보고서... 산업·농공단지 남녀 공용으로 불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어서 맘대로 쓸 수 없어요" 전남지역 산업·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여성 전용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전남여성플라자가 발간한 '전남 산업·농공단지 여성근로자 근로환경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산업·농공단지 여성 근로자는 유해물질·소음·환기 등 작업환경 만족도가 낮고, 작

업장 내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았다. 평균 1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된 기업이 많은 전남 산업·농공단지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 및 휴게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과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공간 부족 및 부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설 미비, 간단한 진료가 가능한 보건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통근차량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5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가 98% 이상 입주한 산업·농공단지의 특성상 통근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근차량이 있더라도 어린 자녀의 통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쳐 통근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는 단지 내 육아시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등 시설도 미흡했고, 산업·농공단지 주변 매점·은행·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 및 관리자도 단지 내 편의시설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척수요 육구를 복수형으로 응답토록 실시한 조사에서는 화장실·휴게실 등 사업장 내 시설 개선 지원, 휴게실·보건소 등 여성 근로자 복지 시설 설치, 남녀 임금 차이 해소 등이 많았다. 연구보고서는 전남여성플라자 홈페이지(www.jwomen.or.kr) 자료실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큰 호응

시간·비용 절감...올해 단축률 79.8%

전남도가 시행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접수된 251종의 민원사무(처리기한 5일 이상)를 분석한 결과, 전체 8607건 중 6865건이 법정시간보다 빨리 처리돼 단축률 79.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가 상승한 것이다. 단축된 처리 기간은 모두 6만3962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담당 공무원이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1일 1점)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남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인 산림산업과 박진홍 주무관과 보건의료과 백애영 주무관, 지역계획과 김경훈 주무관 등 6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고영봉 전남도 도민소통실장은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감동 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돌봄 아동 겨울방학 급식 지원

결식 우려 1만6354명 대상

광주시는 겨울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돌봄이웃 아동 1만6354명에게 26일부터 2월 28일까지(방학 평균 50일) 급식을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급식비 지원단가 4000원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 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를 포함한 1만6354명이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지원대상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

원 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보호필요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 그 외 교사, 동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를 지급하며, 급식제공 기관 1097곳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식당 778곳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다.

또 빗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서 도시락을, 분량농협마트 등 7개 마트에서 식품(부식 등)을 지원받고 지역아동센터 308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소규모 음식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해야"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편의점·음식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 내용은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인 공공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공공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권위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했다. 제과점은 99.1%, 식품 소매점은 98%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SONGDO

(주) 송도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